

1. 개요

- ☐ 일시·장소 : 2021. 9. 30.(목) 10~12시 / Zoom 영상회의
- ☐ 참석 : 19명 (박종서 단장 등 위원 15, 관계부처 2, 사무국 등 2)
- ☐ 주요내용 : 그간 소분과회의, 운영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부문별 안전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

2. 회의 결과

① 생산부문

- 관행농업의 “동참” 보다는 “전환·확대” 등의 표현이 더 적합함
- 유기축산은 동물복지, 경축순환 등의 표현으로 바뀌어야 함. 우리나라에 100여 유기축산농가가 있는데, 국제기준으로 제외할 수 없음
- 수도작은 인접지역, 완숙퇴비 보다는 근원적 문제를 기술해야 함
- 환경서비스지불제 용어는 환경부에서 사용하므로 변경이 필요함
- 농가의 어려움 중 기술적 문제가 많으므로 기술혁신이슈도 포함
 - 기술개발 이슈가 자료 초안에 있었으나 소분과 논의에서 제외됨
 - 저탄소기술에만 치중, 새로운 병해충 등 기술혁신도 필요함
 - 기술 지향은 아니지만 기술혁신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. 에너지기술만 이야기하는 문제가 있는데, 비에너지기술, 생산성 향상 기술, 수도작의 기술혁신 내용도 포함해야 함
- 농촌진흥청의 유기농업 연구·기술개발 계획이 추진되어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함

② 소비부문

- 소비 확대를 위해 대량 소비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문제임. 지역/전국단위정책은 양립이 어렵고 탄소중립 이념과 위배될 우려가 있음

- 다른 기관이 이미 하고 있는 시스템을 의안으로 할 수 없다고 봄. 공급·수요의 완충기능과 양립에 대해 필요/불가 견해가 상충함
- 시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정책제안 대상으로 할 수 없음. 전국단위를 만들면 그쪽으로 쏠릴 것임. 큰 단위 지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역시스템을 만들어야 함. 지역·전국 모두 필요함
- 친환경의 범주를 확대하고 환경친화농업으로 가는 것은 친환경 소비 30%와 맥락이 통해야 함. 이에 대해 법령·제도 소분과에서 정리하고 생산, 소비 소분과는 그에 맞춰 진행하면 좋겠음
- 30% 소비 견인을 위해 가공을 중요시하고 포함해야 함
- 로컬 중심의 유통시스템이 중요하지만 전국 공통의 코드 기반이 필요함. (1안) aT 중심의 통합플랫폼 (2안) 가락시장 등 허브시장에 친환경농산물 취급
- 농민입장에서는 기술문제보다 판로문제가 더 어려움. 소비 촉진을 위해 차액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. 친환경소비가 탄소를 저감하는 것이라면 우선구매가 아니라 의무구매이어야 함. 또한 직불제 등 소득보장 정책을 강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음
- 유기축산, 경축순환 검토 및 임축(농)공영 등 적합한 용어 발굴이 필요함
- 환경부의 녹색구매제도처럼 자조금 적립 검토가 필요함

3] 법령제도부문

- “진입장벽 완화”는 “지원체계 강화”로 수정이 필요함. 30% 성취를 위해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어야 함. 육성지원센터, 민관협력체계 등의 지원 장치가 필요함
- 유기농을 분리하고 친환경을 확대하는 안은 현실성을 검토해야 함
 - 유기농업을 강화하면서 농업전반의 환경기능을 확대하는 두 목적은 법이 이원화되면 어려워질 수 있음. 법을 분리하기보다 하나로 포괄하면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게 가능할 것임

- 농업환경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택형 직불제가 있는데, 이 법으로 들어오는 게 타당하지만, 현장의 우려를 검토해야 함. 이 주제만 별도의 토의가 필요함
- 소비자 혼란도 없어야 함. GAP도 친환경으로 믿는 실정이므로 소비자 반응을 검토해야 함. 유기농과 환경친화농을 분리해도 기존 인증에 영향을 없게 하는 것이 핵심으로, 인증표시 및 명칭에 영향이 없어야 함. 관리 근거 법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이관하는 것임. 다만 인증 패러다임은 과정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함
- 소비자는 이미 혼란이 있어, 유기농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함
- 혼란의 원인은 다른 데 있음. 인증체계가 아니라 농민지원체계를 구분하자는 것이고 목적이 뚜렷해야 함
- 발음의 문제로 “인정기구”라고 칭하는 게 좋음. 인정기구는 별도 설립이 핵심이 아니라 인원의 전문성이 더 중요함. 인정기구의 설립은 재검토하여 되도록 포함시켰으면 함
- 2019~2020년 유기농 비중이 많이 늘어, 연 25% 증가함. 무농약 명칭의 문제를 개선하고 가공을 더 중요시해야 함

3. 향후 계획

- 친환경농업TF 제4차 회의: 2021년 10월 29일(금) 오후, 장소 미정